

www.eai.or.kr

EAI 워킹페이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윤성이(경희대)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시점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가 일상적으로 확산하면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 트렌드(trend.google.com)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 10월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가 2017년 1월 초에 최고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염정운·정세훈 2019, 10).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시기부터 가짜뉴스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가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정상운·정세훈 2019, 11). 2020년 총선에서도 전자 개표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확산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짜뉴스로 판명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경우 여전히 사실로 믿고자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문제는 탈진실(post-truth) 시대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와 연결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탈진실을 “여론 형성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이 다른 것보다 영향력이 덜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한다(Harsin 2015). 즉 사람들이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신념에 더 의존함으로써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다. 탈진실의 시대에서는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의 공리에 따른 상대주의가 지배하면서 불안과 위기가 폭증하게 된다(김광기 2020, 232). 이러한 시대에는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무엇이 사실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파카스와 쇼우(Farkas and Schou 2018)는 라클라우(Laclau 2005)의 “부유하는 기표” (floating signifier) 개념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설명한다. 부유하는 기표는 적대적인 진영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집단이 내세운 세계관이고 올바른 관점이다(김광기 2020). 부유하는 기표는 헤게모니 투쟁에서 승리한 집단의 논리이고 진실이다. 탈진실 시대의 사실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고 믿고 싶어 하는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대적 진영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친숙한 대안적 사실을 구축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방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양식과 사회 운영체계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심오하다.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과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전환시대를 살고 있다. 전환시대에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의 틈바구니에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무엇이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판단하기 힘들거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짜뉴스는 헤게모니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구조, 체계 및 운영 원리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인식 및 가치체계의 변화라는 전환시대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구조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모든 현상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구조는 행위를 제약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조도 없다. 구조주의 이론가들은 개인과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심층의 구조가 사회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 행위는 개인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특정한 사회관계의 틀이나 운영 원리에 의해 강하게 규정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과 선택 역시 전적으로 자율적일 수 없으며 정치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사회 구조 측면에서 진영정치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시민의 속성 및 특성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하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다.

2. 가짜뉴스에 관한 기존 연구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나,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가짜뉴스’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민희 2022, 156).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면 뉴스의 형태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황용석·권오성, 2017; Allcott & Gentzkow, 2017). 가짜뉴스는 기만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개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주장과 가치가

보편적 사실과 차이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을 찾게 되고 가짜뉴스를 수용하게 된다(Strong 2017). 가짜뉴스 수용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관련이 있다. 확증편향이란 논리와 이성애 근거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별적으로 습득하면서 기존의 신념과 믿음을 강화하는 편향적 정보 처리 과정을 말한다(Hart et al. 2009). 기존 언론의 보도 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생긴다. 이때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가짜뉴스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염정운·정세훈 2019, 12). 정보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확정보다는 정보의 유용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Guess et al. 2019, 3).

그간의 가짜뉴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수준의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es), 즉 가짜뉴스 확산이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들의 가짜뉴스 소비 행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oward, Bradshaw, Kollanyi & Bolsolver 2017; Silverman 2016; Weeks & Garrett 2014).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무지 이론(ignorance theory)과 양극화 이론(polarization theory)이 있다. 무지 이론이 정확성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라면 양극화 이론은 목표 지향적 이론이다. 무지 이론은 연령, 인지적 성찰(cognitive reflection), 정치지식,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가짜뉴스 공유 정도를 분석한다. 브랜트(Brandt) 등은 뉴스의 공급원 차원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설명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짜 뉴스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찾게 된다(Brandt et al. 2014).

한편 양극화 이론은 가짜뉴스 공유의 중요한 동인인 당파성에 초점을 맞춘다. 게스(Guess)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보수주의자와 공화당원이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선거 기간 동안 가짜뉴스 공급과 소비 모두 트럼프를 지지하는 내용이 더 많았는데 이는 정보의 정치적 유용성을 더 중시하는 목적 지향적 정보수용 태도 때문이었다(Guess et al. 2019).

오스먼덴(Osmundsen) 등은 미국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짜뉴스 공유는 점점 양극화되는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라는 현실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Osmundsen et. als. 2021). 아미라(Amira) 등의 연구 역시 정치적 양극화가 가짜뉴스 공유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가장 큰 동기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면 이를 반격하고 반대 집단의 신뢰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공유하게 된다(Amira et al. 2019). 브래디(Brady) 등의 연구 역시 개인이 어떤 뉴스

기사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 때 내부 집단에 대한 지지보다는 상대 정당에 해를 끼치는 기사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고 설명한다(Brady et al. 2017). 한편 넬케스와 웨스트우드(Lelkes & Westwood 2017)는 당파성이 강한 사람은 외부 정당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부 정당을 돕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3.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현황

다수의 응답자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절대다수인 81.3%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은 4.5%에 그쳤다. “나 역시 가짜뉴스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에 대해 60.8%가 동의했고, 13.4%만이 속지 않을 것이라 했다.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속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다보니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58.7%에 달했다. 응답자의 18.2%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표 1〉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

	전혀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 않음	보통임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가짜뉴스 심각성	11(.9)	45(3.6)	178(14.3)	541(43.4)	472(37.9)
속을 가능성 높다	32(2.6%)	135(10.8%)	322(25.8)	566(45.4)	192(15.4)
규제해서는 안됨	305(24.5)	426(34.2)	289(23.2)	179(14.4)	48(3.8)

응답자의 44.7%가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접촉한 경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68.4%가 인터넷(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이라고 답했고,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는 13.5%에 불과했다. 한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한 책임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나, 정치인과 기존 언론 역시 높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표 2〉 주체별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책임: 4점(다소 많다) + 5점(매우 많다)

보수 유튜브	진보 유튜브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보수 언론	진보 언론
841(67.5%)	807(64.7%)	657(52.7%)	681(54.6%)	700(56.1%)	689(55.3%)

기존 국내외 사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응답자(63.8%)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나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이 허위 정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진술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 74.3%가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빨리 확산된다”고 인식했다.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 현상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인식

	전혀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 않음	보통임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소셜미디어가 문제 악화	17(1.4)	78(6.3)	356(28.5)	642(51.5)	154(12.3)
거짓이 더 빨리 확산	7(.6)	50(4.0)	264(21.2)	530(42.5)	396(31.8)
참과 거짓 구분 가능	75(6.0)	394(31.6)	501(40.2)	227(18.2)	50(4.0)

4.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가치나 목적과 같은 행위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체제나 규범 및 사회관계 틀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행위자 이론이 개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반면, 구조주의자들은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관계 틀이나 작동 규칙에 주목한다(방인혁 2008). 본 연구는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행위자 요인과 구조 요인으로 구분하여 가짜뉴스 수용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행위자 요인으로는 무지 이론(ignorance theory)에서 강조하는 성별, 나이, 학력, 계층, 이념, 정치 지식 등의 변인을 채택하였다. 구조 요인은 양극화 이론(polarization theory)이 중시하는 당파성과 사회갈등 구조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사용하였다.

4.1 행위자 요인

남성의 48.4%가 가짜뉴스를 받거나 본 경험이 있으나 여성은 40.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가짜뉴스 경험에 관한 연령 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사례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 내용을 분석한 오스먼센(Osmundsen) 등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층이 젊은 층에 비해 가짜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Guess et. als. 2019) 등의 연구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대에 비해 6배가 넘는 가짜뉴스를 공유했으며, 이는 아마도 젊은 세대보다 디지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설명한다.

〈표 4〉 성별 가짜뉴스 경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df	유의확률	에타자승
남자	628	.48	.500	7.191	1, 1245	.007	.006
여자	617	.41	.492				

정치관심도와 가짜뉴스 경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0.18(경험 없다 0, 있다 1) 이었는데 정치관심도가 매우 높은 집단의 경우 0.62의 평균을 보였다.

〈표 5〉 정치관심도와 가짜뉴스 경험 차이 (경험 없다 0, 있다 1)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있음	매우 있음	전체
평균	.18	.30	.42	.53	.62	.45
표준 편차	.387	.458	.494	.500	.487	.497
N	34	199	551	302	161	1247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거짓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14,107	4	3.527	14.894	.000	.046

정치지식 수준 역시 가짜뉴스 경험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개의 정치지식 문항 가운데 한 개도 맞추지 못한 집단의 평균이 0.33이었으나 4개 모두 맞춘 집단은 0.63으로 가짜뉴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계층, 학력, 효능감 등의 변수와 가짜뉴스 경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치지식과 가짜뉴스 경험 차이 (경험 없다 0, 있다 1)

	0개 정답	1개 정답	2개 정답	3개 정답	4개 정답
평균	.33	.38	.44	.42	.63
표준 편차	.474	.486	.497	.495	.483
N	49	254	399	357	188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8,659	4	2.165	8.976	.000	.028

다음으로 가짜뉴스를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는 총 8개이며, 이 가운데 4개는 보수 성향의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진보 성향이 믿고 싶어 하는 뉴스이다.

※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 1-가. 한국전력의 적자가 대단히 크게 발생한 것은 탈원전 정책 탓이다.
- 1-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 조작 등 선거 부정이 있었다.
- 1-다.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으로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 1-라. ‘검수완박(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지구대 인력이 부족해졌다.

※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

- 2-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졌다.
- 2-나. 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 2-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 2-라.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만 ‘봐주기 수사’를 해서 발생한 것이다.

가짜뉴스의 수용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 정도가 보수 성향에 비해 더 높게 나왔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발생에 대해서는 68.1%가 사실로 인식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은폐에 대해서도 59.6%가 사실로 믿었다. 한편 2020년 총선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33.9%만이 사실로 인식했고, 북한의 선거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표 7〉 가짜뉴스 수용 정도(%)

가짜뉴스	1-가	1-나	1-다	1-라	2-가	2-나	2-다	2-라
거짓	42.7	66.1	54.0	38.1	31.9	40.3	47.5	44.9
사실	57.3	33.9	46.0	61.9	68.1	59.6	52.5	55.1

성별, 나이, 학력, 정치지식 등 9개의 행위자 요인이 가짜뉴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변인으로는 계층, 학력, 이념, 정치지식, 효능감 2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과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의 경우 당연히 보수일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정치관심도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나 정치지식은 부(-)의 관계를 보여 정치지식이 낮으면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이 높았다. 효능감 변수 가운데 공직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지식이 많을수록 가짜뉴스를 수용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는 해외사례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무지 이론(ignor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지만 진실과 진실을 구별할 인지적 성찰(cognitive reflection)이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거짓을 공유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페니쿡과 랜드(Pennycook & Rand 2019)의 미국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인지 성찰 테스트(cognitive reflection test)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참인지 거짓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게스 등의(Guess et. als. 2019) 연구 역시 노인들이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젊은 세대보다 디지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설명한다.

〈표 8〉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251	.049	1.787	.074
나이	-.018	-.012	-.398	.691
계층	-.228	-.096	-3.425	.001
학력	-.141	-.064	-2.227	.026
이념	.377	.293	10.694	.000
정치관심도	.138	.053	1.828	.068
정치지식	-.163	-.069	10.694	.000
효능감 1	-.095	-.043	-1.379	.168
효능감 2	.215	.082	2.680	.007
수정된 $R^2 = .115$, $F(9, 1237)=19.065$				

효능감 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나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효능감 2: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확률에 대해서는 나이, 이념, 효능감 2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고 진보 성향일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감 변수 가운데는 보수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각을 듣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과 달리 학력과 정치지식 변인은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306	.046	1.887	.059
나이	-.525	-.261	-10.101	.000
계층	-.017	-.006	-.225	.822
학력	.063	.022	.865	.387
이념	-.626	-.374	-15.424	.000
정치관심도	.055	.016	.631	.528
정치지식	-.110	-.036	-1.364	.173
효능감 1	-.134	-.046	-1.784	.092
효능감 2	-.653	-.191	-7.074	.000
수정된 $R^2 = .305$, $F(9, 1237)=61.751$				

4.2 구조 요인

다음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호오도, 영호남 갈등, 여야 갈등, 이념 갈등, 온라인 네트워크의 유유상종 등의 변인들이 가짜뉴스 수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1,247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4개 모두 사실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209명이었으며, 진보 성향 가짜뉴스를 모두 사실로 수용한 응답자는 448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호오도 평가(0~10점)를 보면 보수 가짜뉴스 수용자의 윤석열 호오도는 4.48인 반면 이재명은 2.80에 그쳤다. 진보 가짜뉴스 수용자의 경우 윤석열 호오도는 1.67이고 이재명은 5.27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역시 보수 가짜뉴스 수용자와 진보 가짜뉴스 수용자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 정치 양극화 구조가 가짜뉴스 수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가짜뉴스 수용 집단 특성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윤석열 국정운영	주관적 이념
보수 가짜 수용(209명)	4.48	2.80	4.92	5.56
진보 가짜 수용 (448명)	1.67	5.27	1.60	4.28

다음으로 양극화 구조와 관련된 6개 변인들이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윤석열과 이재명 호오도, 영호남 갈등과 여야 갈등에 대한 인식이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에 대해 호감을 가질수록 그리고 이재명을 싫어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영호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여야 갈등의 경우 반대로 갈등 인식이 약할수록 가짜뉴스 수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공간의 유유상종 네트워크는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공간의 정서적 양극화와 끼리집단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강한 연결성을 보이고 이는 끼리집단 형성과 확증편향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친구 및 지인들의 정치적 견해가 본인과 일치하는 정도가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윤석열 호오도	.245	.298	10.376	.000
이재명 호오도	-.207	-.244	-8.500	.000
온라인 유유상종	.055	.014	.567	.571
영호남 갈등	.330	.121	4.270	.000
여야 갈등	-.374	-.124	-2.831	.005
이념 갈등	.037	.012	.280	.780
수정된 $R^2 = .231$, $F(6, 1240) = 63.412$				

다음으로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수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호오도는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 인식에 대해서는 영호남 갈등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여야 갈등과 이념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확률이 높았다. 온라인 공간의 양극화 구조는 보수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12〉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윤석열 호오도	-.561	-.526	-24.023	.000
이재명 호오도	.371	.337	15.376	.000
온라인 유유상종	-.002	.000	-.026	.980
영호남 갈등	-.016	-.004	-2.07	.836
여야 갈등	-.409	-.104	-3.125	.002
이념 갈등	.467	.119	3.559	.000
수정된 $R^2 = .554$, $F(6, 1240) = 258.839$				

4.3 행위자 요인과 구조 요인 비교

끝으로 행위자 변인 모형과 구조 변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의 경우 행위자 변인 모형의 수정된 R^2 값이 .115로 구조 변인 모형의 수정된 R^2 값 .231보다 낮았다.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있어서도 행위자 변인 모형의 수정된 R^2 값이 .305로 구조 변인 모형의 수정된 R^2 값 .554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행위자 변인보다는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 변인이 한국 사회의 가짜뉴스 수용 여부에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213	.042	1.649	.099
나이	-.129	-.084	-2.993	.003
계층	-.196	-.083	-3.187	.001
학력	-.099	-.045	-1.698	.090
이념	.073	.057	1.931	.054
정치관심도	.158	.061	2.270	.023
정치지식	-.182	-.077	-2.822	.005
효능감 1	-.112	.064	-1.765	.078
효능감 2	-.001	.000	-.009	.993
윤석열 호오도	.248	.303	9.541	.000
이재명 호오도	-.194	-2.29	-7.653	.000
온라인 유유상종	.103	.027	1.070	.285
영호남 갈등	.295	.108	3.832	.000
여야 갈등	-3.22	-.107	-2.452	.014
이념 갈등	.087	.029	.661	.509
수정된 $R^2 = .257$, $F(15, 1231) = 29.766$				

종속변인: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정도

행위자 변인과 구조 변인이 가짜뉴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전체 변인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95% 수준)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 계층,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영호남 갈등, 여야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윤석열 호오도($\beta = .303$)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이재명 호오도($\beta = -2.29$), 영호남 갈등($\beta = .108$), 여야 갈등($\beta = -.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좋아할수록 그리고 이재명을 싫어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영남과 호남 그리고 야당과 야당의 관계가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행위자 변인 가운데 가짜뉴스 수용이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나이($\beta=-.084$)와 계층($\beta=-.083$)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본인이 속하는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래 <표 14>에서는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인과 행위자 변인을 비교해 보았다. 진보 성향 가짜뉴스 역시 보수 성향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윤석열($\beta=-.445$)과 이재명($\beta=.324$)에 대한 호오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석열을 싫어할수록 그리고 이재명을 좋아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나이($\beta=-.158$)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인식($\beta=.116$)이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았다.

<표 14>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379	.057	3.025	.003
나이	-.318	-.158	-7.590	.000
계층	-.061	-.020	-1.032	.302
학력	-.001	-.000	.019	.985
이념	-.074	-.044	-2.008	.045
정치관심도	-.008	-.002	-.121	.093
정치지식	-.100	-.032	-1.590	.112
효능감 1	-.118	-.041	-1.912	.056
효능감 2	-.200	-.059	-2.676	.008
윤석열 호오도	-4.75	-.445	-18.820	.000
이재명 호오도	.357	.324	14.526	.000
온라인 유유상종	-.009	-.002	-.094	.925
영호남 갈등	.022	.006	.300	.764
여야 갈등	-.269	-.068	-2.113	.035
이념 갈등	.454	.116	3.571	.000
수정된 $R^2 = .588$, $F(15, 1231)=119.325$				

종속변인: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정도

전체 변인 가운데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와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그리고 여야 갈등에 대한 인식 4개 변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영향력 가장 높은 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었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국 정치의 특성으로 인물 정치를 들 수 있다. 한국 정치 균열구조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이념, 세대 갈등과 여야 갈등 모두 대통령 혹은 진영의 지도자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인다. 그간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집단과 보수집단 간의 정서적 차이는 크나 구체적인 정책과 태도에 있어서는 갈등이라 할 만한 차이는 없다. 세대와 젠더 갈등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 정책이나 젠더 인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과 정치 갈등은 집단 간의 실제적 차이보다는 정치권에 의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의 결과로 나타나는 측면이 강하다. 가짜뉴스 문제 역시 기존의 갈등 요인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가짜뉴스를 사실로 인식하고 확산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오도로 나타났다.

5. 결론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대다수의 응답자(81.3%)가 한국 사회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짜뉴스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높았다. 다수의 응답자(60.8%)가 자신도 가짜뉴스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속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13.4%)에 그쳤다.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감이 높다 보니 언론의 자유보다 가짜뉴스 규제가 더 우선이라는 응답도 58.7%에 달했다. 가짜뉴스의 책임은 유튜브, 정치인, 언론 모두 높게 나왔다.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응답자(63.8%)가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답했고, 절대다수의 응답자(74.3%)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빨리 확산된다고 믿었다.

거짓으로 판명된 가짜뉴스를 믿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특히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 정도가 보수 성향 가짜뉴스에 비해 더 높게 나왔다. 보수 성향 가짜뉴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61.9%) 사실로 믿는 뉴스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지구대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뉴스였다.

진보 성향 뉴스 중에 가장 많이(68.1%) 믿은 뉴스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2020년 총선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33.9%만이 사실로 인식했고, 북한의 선거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행위자 모형과 구조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9개의 행위자 변인 가운데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이념, 계층, 학력, 정치지식, 효능감 등이었고, 그 가운데 이념 변인의 영향이 가장 높게($\beta = .293$) 나타났다. 진보 성향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이념($\beta = -.374$), 나이 ($\beta = -.261$), 효능감 2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구조 모형의 경우 보수 가짜뉴스를 믿을 확률에 대해서는 윤석열 호오도($\beta = .298$), 이재명 호오도($\beta = -.244$), 영호남 갈등, 여야 갈등 등의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진보 성향 가짜뉴스를 믿을 확률 역시 윤석열 호오도($\beta = -.526$)와 이재명 호오도($\beta = .337$)가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여야 갈등과 이념 갈등 변인 역시 유의미하게 나왔다.

미국 등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치 양극화 구조가 가짜뉴스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셜미디어 확산과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역시 가짜뉴스 확산을 촉진하는 악영향을 준다. 또한 거짓은 진실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다. 다수가 가짜뉴스에 규제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가짜뉴스 사례를 연구한 오스먼센 등은 정치적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렇지만 양극화 해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팩트 체크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안타까움도 표했다(Osmundsen et. als. 2021, 1013).

가짜뉴스의 확산은 탈진실 시대라는 사회변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의 시대에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는 가짜뉴스만이 아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편향된 뉴스는 가짜뉴스만큼이나 사회를 분열시키고 위험에 빠트린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정보 소비 행태도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기 취향에 맞는 정보를 골라 보는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끼리 집단 현상과 확증편향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찾고 공유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경멸을 담은 정보로 가득하다면, 이는 가짜뉴스만큼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강화하고 외집단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대안적 진실(alternative facts)을 쉽게 정립한다. 그 결과는 당연히 정치 양극화와 사회 분열로 이어진다.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시민교육 등 여러 방안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유튜브, 정치인, 언론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외 사례와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가짜뉴스 문제의 궁극적 해답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기. 2020. “포스트 투루스시대의 도래와 가짜뉴스, 그리고 베버의 효용.” 『사회이론』 가을/겨울.
- 민희. 2022. “가짜뉴스 확산, 그 이후:보수와 진보의 가짜뉴스 노출과 제도 신뢰의 편향.” 『정치·정보연구』 제25권 3호.
- 박아란. 2020. “뉴스미디어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MEDIA 정책 리포트』 7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방인혁. 2008. “구조와 행위자 관계에 관한 신제도주의 이론들의 합의 연구: 구조-제도·사상-행위자 삼분론의 정립을 위하여.” 『사회과학연구』 16권 2호.
- 염정윤, 정세훈. 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 염정윤·정세훈. 2019.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 오택섭, 박성희. 2015. “적대적 매체 지각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 이종혁. 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호적, 중도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 황용석, 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6권 1호.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 Amira, Karyn, Jennifer Cole Wright, and Daniela Goya-Tocchetto. 2019. “In-group Love versus Out-group Hate: Which Is More Important to Partisans and When?” *Political Behavior*. 60.
- Brady, William J., Julian A. Wills, John T. Jost, Joshua A. Tucker, and Jay J. Van Bavel. 2017. “Emotion Shapes The Diffusion of Moralized Content in Soc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 (28).
- Brandt, Mark J., Christine Reyna, John R. Chambers, Jarret T. Crawford, and Geoffrey Wetherell. 2014. “The Ideological-conflict Hypothesis: Intolerance among Both Liberals and Conservativ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3, No. 1.
- Farkas, John and Jannick Schou. 2018. “Fake News as a Floating Signifier: Hegemony, Antagonism and the Politics of Falsehood.” *Journal of the European Institute for Communication and Culture*. Vol. 25, No. 3.
- Frey, D. 1986. “Recent research o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In L.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New York, NY: Academic Press.

- Guess, Andrew, Jonathan Nagler, and Joshua Tucker. 2019. "Less Than You Think: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Fake News Dissemination on Facebook." *Science Advances*. Vol. 5, Issue 1.
- Gunther, A.C., Miller, N. and Liebhart, J.L. 2009.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a test of the hostile media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Vol. 36, No. 6.
- Harsin, Jayson. 2015. "Regimes of Posttruth, Postpolitics, and Attention Economies". *Communication, Culture and Critique*. Vol. 8, No. 2.
- Hart, W., Albarracin, D., Eagly, A. H., Brechan, I., Lindberg, M. & Merrill, L. 2009. "Feeling validated versus being correct: A meta-analysis of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5, No. 4.
- Iyengar, S. and Hahn, K.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1.
- Lacla, Ernesto. 1990. *New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s*. London, UK: Verso.
- Levendusky, M.S. 2013. "Why do partisan media polarize vie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7, No. 3.
- Nelkes, Yphtach and Sean J. Westwood. 2017. "The limits of partisan prejudic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9, No. 2.
- Nielsen, R.K. and Graves, L. 2017. "News you don't believe." Audience perspectives on fake news.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University of Oxford.
- Osmundsen, Mathias, Alexander Bor, Peter B. Vahlstrup, Anja Bechnann, and Michael B. Petersen. 2021. "Partisan Polarization is the Primary Psychological Motivation behind Political Fake News Sharing on Twitt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5, No. 3.
- Pennycook, Gordon, and David G. Rand. 2019. "Lazy, Not Biased: Susceptibility to Partisan Fake News Is Better Explained by Lack of Reasoning Than by Motivated Reasoning." *Cognition*. 188.
- Strong, S. I. 2017. "Alternative facts and the post-truth society: Meeting the challeng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Online*. Vol. 165, No. 1.
- Stroud, N.J. 2008.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Vol. 30, No. 3.

■ **저자:** 윤성이_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대담록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2월 19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979-11-6617-7132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